

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-87호

「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」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8월 25일

##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###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문화재의 반출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, 문화재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체험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리시의 문화재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·관리·활용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「문화재보호법」에서 문화재의 수출 및 반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반출금지 조항을 삭제함(안 제21조).

나. 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대한 보조금의 범위를 문화재의 관리·보호·수리 또는 기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외에 문화재의 활용에 대한 경비를 포함시켜 문화재(유적지 등) 활용사업 지원에 대한 지방보조

금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27조).

### 3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1일  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행정  
자치수석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· 주소 ·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

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)

(전화 042-270-5124, FAX 042-270-5029, E-mail : ykh507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### 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##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를 삭제한다.

제27조제1항제4호 중 “수리”를 “수리·활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수리”를 “수리·활용”으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반출금지) 시문화재와 가지정문 <u>화재는 대전광역시외의 관할구역 밖으</u> <u>로 반출하지 못한다. 다만, 문화재의</u> <u>전시 등 향토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</u> <u>반출하고 그 반출한 날부터 1년 이내</u> <u>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</u> <u>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</u> <u>아니하다.</u>	<삭제>
제27조(보조금) ① (생략) 1.~3. (생략) 4. 그 밖에 문화재의 관리·보호· <u>수리</u> 또는 기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하는 경 우에는 시장은 그 문화재의 <u>수리</u> ,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. ③ (생략)	제27조(보조금) ① (현행과 같음) 1.~3. (현행과 같음) 4.----- <u>수리·활용</u> ----- ②----- ----- <u>수리·활용</u> ----- ③ (현행과 같음)

# 관 계 법 령

## 문화재보호법

제39조(수출 등의 금지) ① 국보, 보물,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. 다만,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,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재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.

1.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·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
2.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

제51조(보조금)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
2.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
3.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·보호·수리·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
4. 삭제 <2015.3.27.>

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.

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·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, 그 지시에 따라 관리·사용하게 한다. 다만,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, 관리자,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, 그 지시에 따라 관리·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52조(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)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·보호·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제74조(준용규정) ① 시·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·제2항을 준용한다.

② 시·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7조, 제31조제1항·제4항,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, 제35조제1항, 제36조, 제37조, 제40조, 제41조제3항,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문화재청장”은 “시·도지사”로, “대통령령”은 “시·도조례”로, “국가”는 “지방자치단체”로 본다.